

【연구논문】

환경경영표준의 내재화와 한국정부의 역할

박진실

(서울대)

I. 서론

국제환경경영표준(Inter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으로써 ISO14000¹⁾은 하나의 국제규범이다.²⁾ ISO14000시리즈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에서 제정한 환경표준이며 ISO는 국제비정부기구(INGO)로 각 국 대표 표준화기구 간 네트워크이다. ISO 표준의 제정과정에는 각 국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을 대표하는 대표기구들이 참여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표기구들은 정부기구인 경우도 있고 국내 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비영리적 사적조직(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ISO에서 제정된 표준은 비강제적 성격을 가지며 국내법으로서의 지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1)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행한 환경경영표준의 공식 명칭이다.

2) 규범이란 정체성을 가진 주체들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행동에 대한 집단적 기대를 말한다. Peter J. Katzenstein, "Introduction: Alternative Perspectives on National Security", in P.J. Katzenstein,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p.5; 규범으로써의 표준에 대한 논의는 정병기, 「표준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새로운 규범의 가능성 및 표준화 전망」, 『한국정치연구』 18:3(2009).

ISO14000의 한 규격인 국제환경경영체제(ISO14001)는 생산의 전주기에 걸쳐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체에게 부여되는 인증으로 정부가 행위자로 나설 여지가 없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시장유인적인 환경규제를 통해 규제비용을 줄이고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법이나 제도장치를 마련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이를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³⁾ 반면, 후발 중견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ISO14001⁴⁾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부분에서 주로 인증이 이루어진 유럽국가⁵⁾와는 달리 개발도상국에서는 ISO14001이 정부 주도로 도입되었다.⁶⁾ ISO14001은 국가 간 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참여나 비준을 통한 국내법적 지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대중공개나 제재의 형태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규제력도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국제성문법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ISO14001을 국내법으로 만드는 현상은 국제규범의 내재화 과정에서 특이하다.

규범 확산과 내재화에 대한 연구는 국제정치학의 세 주요 이론 별로 시각이 상이하다. 권력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주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자유주의, 이념에 초점을 맞추는 구성주의가 규범을 각기 다르게 해석한다. 규범을 통한 국가 행동의 변화는 강압(coercion), 유인(incentive; 경제적 이익), 그리고 설득(persuas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먼저, 현실주의자의 관점에서 규범은 패권국에게 유리한 국제정치 환경을 조성하고 패권적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현실주의자들은 강압과 패권국이 제공하는 위협이나 유인(threat and incentive)에 의해 다른 국가들의 규

3) 신상범, 「환경정책에서 국가의 역할」, 『아세아연구』 52권 4호(2009): 174.

4) ISO14001은 ISO14000시리즈 중 환경경영체제(Environment management system)로 인증과 의무보고규정을 가지고 있다.

5) 국제환경표준 ISO14001의 수용은 초반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6년 제정 당시 유럽국가에서의 인증비율은 87.94%에 달하였고 그 후로도 40%를 계속 유지하였다. ISO Survey, 2009.

6) 신상범, 「지구환경정치와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 제29집 1호(2008): 248.

범준수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규범에 의한 국가행동의 변화는 이렇듯 권력질서가 반영된 물질적 압박과 보복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유주의자들은 규범이 행위자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자기이익추구를 방지하고 협력을 달성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고 본다. 행위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규범을 준수하고 이를 통해 협력이 이루어진다. 구성주의자들은 규범을 적절한 행동(appropriate behavior)에 대한 공유되는 관념, 기대, 신념이자 정체성의 산물이라 정의한다.⁷⁾ 규범은 행위자의 정체성, 이익, 신념을 재구성하여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는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⁸⁾에 따라 움직이며 행위자가 사회화(socialization)를 통해 옳다고 여겨지는 규범을 내재화(internalization)시키면서 규범을 준수한다. 규범의 변화는 행위자의 행동 변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이론들에 비추어봤을 때, ISO14001의 내재화 현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ISO14001이 국제비정부기구에서 비국가행위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규범으로 비강제성을 띠는데도 불구하고 규범수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주요 규범도입자의 역할을 하면서 제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한다. 한국의 경우에 이 규범은 정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되었고 종합시책을 통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말 환경관련 법률들이 다수 제정되었지만 그것은 주로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에 근거한 것이었다. 1993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비준안을 통과시킴으로서 국제규범이 국내법적 지위를 가지긴 했지만 한국에서 국가 간 협약이 아닌 환경규범은 환친법이 유일하다.

둘째, ISO14000의 제정배경에서 비롯된 환경과 무역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규범의 내재화 과정에서 접근방식의 차이를 가져온다. ISO14000

7) Finnemore and Sikkink, 1998, p.894.

8) James G. March and Johan P. Olsen, "The Institutional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 No.52, Vol.4(1998).

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환경규범과 표준의 조화를 통한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하는 자유무역 규범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이는 규범수용자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ISO14000은 환경정책의 기제로 작동될 수도 있고 무역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규범수용자의 이득(interest)이나 규범수용지역의 환경적 맥락에 따라 규범이 다르게 해석되어 내재화될 수 있다.

셋째, 외부 규범(국제규범)이 지역 내부(국내정치)에 내재화⁹⁾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996년 탄생한 환경경영표준이라는 새로운 환경규범은 한국 내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수용 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증의 형태로 운영되는 환경경영체제는 기업들의 인증으로 그 내재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인증을 지표로 하여 국제환경경영표준이 인증의 규모와 확산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제규범이 지역 내부로 내재화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규범수용자로서의 한국정부가 법제화와 정책을 통해 규범을 수용하는 과정을 살펴봄에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라는 이념 사이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 글은 비정부기구에서 제정한 비강제적 성격을 가지는 국제환경경영표준, 그 중에서 환경경영체제가 한국정부에 의해 법제화되며 국내에 수용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한국 정부는 1996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을 제정하면서 국제환경표준인 ISO14001이 도입하였다. 환친법의 제정과 더불어 한국에는 환경경영체제 뿐 아니라 그 상위 개념인 ‘환경경영’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들어오게 되었다. 최빈국에서 경이로운 성장을 보인 한국의 역사적 경험상 ‘발전’은 중요한 규범이었다. 환친법의 도입은 경제성장에 있어 환경을 고려한 첫 번째 법제화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전 세계 인증의 3.55%를 차지하며 2008년 기준 ISO14001

9) 여기에서 내재화는 법률로 수용됨으로써 국내정치, 사회에 변화를 초래함을 뜻한다.

인증 수 6위를 기록했다.¹⁰⁾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 1990년대에도 꾸준히 인증규모의 증가를 유지했던 국가들과는 달리 2000년대 들어 급속도로 인증규모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인증율은 연평균 41%의 증가를 보여왔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 31%의 일본과 25%인 영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높은 수치이다.¹¹⁾ 한국은 ISO14000이 정부 주도로 법제화 되어 수용되었고 환경경영체제가 국내에서 큰 규모로 확산된 사례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먼저, 한국정부는 왜 ISO14000시리즈를 주도적으로 수용하였는가? 환경경영표준인 ISO14000은 조약이나 국제법 형태의 강행규범이 아닌 비정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규범이다. 규범준수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는 자발적 성격의 규범을 한국 정부가 법제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규범수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부가 국내적으로는 어떠한 정책과 정책신히로써 실질적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6년 ISO14000 공표와 한국정부의 환친법 제정 이후 한국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환경경영표준에 대한 정책을 펴나갔다. 이에 기반하여 두 번째 질문은 서로 다른 정부가 ISO14000을 어떻게 들여왔는가? 이다. ISO14000은 속성상 환경과 수출에 관련된 규범이 혼재되어 있다. 정부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한국에서 환경경영표준의 성격과 속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은 기업의 인증구축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의 법제화 과정과 정책을 검토해보며 규범수용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에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를 살펴본다.

10) ISO Survey 2008.

11) 수치는 ISO Survey 2001-2009에서 제시한 각 국 연도별 인증 수로부터 계산.

정부가 법제화와 제도화를 통해 들여온 환경경영체제를 수용하는데 있어 환경경영체제의 실질적인 대상인 기업들의 속성을 파악한다. 즉, 어떤 기업들이 ISO14001을 구축, 인증 받으며 그 경향이 어떠한지 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환경과 무역이라는 ISO14000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 확인한다. 또한 한국의 환경경영체제 내재화 양상과 정부의 법제화 과정을 기술한다. 그 다음 장에는 한국정부가 국제환경경영표준을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였는지, 무역증진의 기제로 사용하였는지 검토한다. 또한 한국 정부 내에서 환경경영 규범을 얼마나 내재화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규범수용자로서의 정부 정책과 지원책의 결과로 한국기업의 인증양상을 검토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시간에 따라 기업들의 인증이 확산되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환경경영체제가 국내 기업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확산되는지 확인해 본다.

II. ISO14000의 속성

1. ISO14000의 규격과 발달과정

ISO14000은 환경경영의 국제표준이다. ISO14000시리즈는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표준 ISO14001, 환경경영체제지침(Additional Guidance) ISO14004, 전과정평가(Life-Cycle Assessment: LCA) ISO14040,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ISO14031, 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ISO14020, 그린회계(Green house gas Accounting and Verification) ISO1406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SO14000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규격은 ISO14001이다. ISO14001은 인증¹²⁾규격으로 기업할

12) 인증(Certification)이란 제품인증과 경영시스템인증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제품 인증이란 규격에 맞도록 제조되었는지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해주고 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ISO14001이 속한 경영시스템 인증은 기업이 나 조직의 경영시스템이 국제규격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 및 이행되고 있는지 심사

동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경영활동을 위한 규격이다. ISO14001은 지속적인 환경성과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해서 조직 시스템과 전 종업원의 책임을 명시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할 것을 규정한다.¹³⁾ 환경경영표준의 수용 대상은 주로 기업이며 정부기관, 조직 등 환경친화적 설비와 경로(process)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설이면 인증 대상이 된다. ISO14001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증(product-based)이 아닌 생산과정, 과정이 친환경적인지 심사하는 과정에 대한 인증(process-based)이다. ISO14001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설비시설이 환경경영표준에서 규정하는 시스템을 수용하여 인정기관의 관리를 받는 제3의 인증기관에 의해 포괄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¹⁴⁾

1996년 국제표준으로 제정, 공표된 이래 ISO14001은 45개 국가에서 1491개 기업이 인증을 받기 시작하여 2009년 159개 국가에서 223149건의 인증을 받기에 이르렀다. 15년간 ISO14001의 연평균 인증 증가율은 40%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가장 많은 인증수를 보이며 증가율도 꾸준하다. 유럽 내 개별 국가 중에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이 가장 많은 인증 수를 보이고 있다. 일본 또한 꾸준히 인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인증수가 증가하면서 2008년 세계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입증해 주는 제도이다.

13) 이병욱, 2005, p.327.

14) ISO14001의 인증제도는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심사,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기업은 인증기관을 통해 ISO14001을 발급받고 최초 1년은 6개월 주기로, 이후에는 연1회 이상 사후관리를 받는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안에 갱신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에 가입되어 있는 인정기관에 의해 관리되는데 인정기관은 한 국가당 하나만 인정된다. 한국의 경우 1996년 한국인증원(KAB)이 설립되어 인증기관과 인증과정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ISO14001을 인증받았다는 것은 그 사업장이 전 생산과정에 걸쳐 환경경영체제를 갖추어 경영방식에 있어 시스템 차원의 환경목표를 달성한다는 뜻이다. 이는 환경친화적 경영방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여겨지며 최근에는 ISO14001을 바탕으로 전과정평가, 환경성과평가, 그린회계 등 더 구체적인 환경조치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에서 가장 높은 인증수를 보유하고 있다.¹⁵⁾ 이렇듯 ISO14001은 규모적으로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처음에 유럽국가들 중심이었다가 점점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다.

2. ISO14000의 배경

국제환경경영표준의 제정에는 두 가지 규범이 관련되어 있다. 먼저, 1992년 리오선언과 어젠다21에서 표명한 지속가능개발 규범이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¹⁶⁾을 말한다. 1992년 브라질 리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천명한 리오선언과 더불어 포괄적 지침을 담은 Agenda21을 내놓음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국제규범으로 발전시켰다. ISO도 UNCED에 초대받아 회의의 준비과정에 IEC와 더불어 직접 참여, 국제환경표준을 만들 것(create)을 요구받았다.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위원회(UNCED) 산하의 ‘지속발전을 위한 산업계획회의(BCSD)’에서 ISO에 최초로 국제표준화 추진을 요청하였다. ISO14000 공식 브로셔에는 ISO14000이 UNCED에서 천명된 지속개발가능발전에 대한 반응으로 제정되었다고 공시한다.¹⁷⁾

다른 하나는, TBT협정¹⁸⁾으로 대표되는 자유무역규범이다. TBT협정은

15) ISO Survey 1997-2009.

16)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United Nations, 1987.

17) ISO, *The ISO 14000 family of International Standards*, 2008.

18) TBT협정은 무역에 있어 기술장벽을 규제하기 위해 WTO의 출범과 함께 채택된 협정으로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서로 다른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및 적합성평가절차(procedures for assessment of conformity)를 국제규격에 기초하여 제·개정토록 함으로써, 이러한 일련의 요건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TBT협정은 1973-79년 도쿄라운드에서 논의되어 GATT의 회원국들이 서명한 표준협정(Standard Code)이 그 전신으로 WTO가 출범하면서 표준협정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개선, 보완,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발표되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표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환경문제의 부상과 더불어 무역에서 환경문제가 고려되기 시작되면서 환경분야에서 표준의 조화가 요구되었다. 환경규제와 환경규격이 나라마다 상이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 수입거부조치를 취하는 일이 나타났다. 미국의 환경심사제도, 캐나다의 CSA, 유럽의 EMAS, 영국의 BS7750 등 특히 선진국에서 엄격한 환경표준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만족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 수입차별이 일어나게 되었다. 국가별로 상이한 환경규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무역규제조치로 작용해 자유무역을 저해하자 규정을 통일, 표준안을 제정해 자유무역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GATT는 무역협정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표준의 조화를 요구하였다.¹⁹⁾ 또한 국제무역시스템을 위한 자발적 표준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²⁰⁾ 각 국 간 환경요건의 차이가 새로운 무역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져 각국 환경관련 규격을 조화시킬 필요성 증가하였기 때문이다.²¹⁾ 이는 환경조항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각국 환경표준의 조화를 의도한 것이다. ISO14000은 상이한 환경표준의 조화 논의를 바탕으로 제기되었다.

ISO14000은 환경협약에서 나온 지속가능발전 규범과, 상이한 각국 환경표준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간 무역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자유무역규범이라는 두 속성을 가진다. 즉, ISO14000은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되 국제환경제재에 따른 무역장벽을 제거하

었다. 특히 적합성평가절차를 조항에 규정함으로써 무역에 있어 환경을 고려하였다고 평가받는다.

- 19) Roht-Arriaza, Naomi. "Shifting the Point of Regulatio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Global Lawmaking on Trade and the Environment", *Ecology Law Quarterly*. 22:479(1995), p.491.
- 20) ICF Incorporated. 1997. *The Role of National Standards Bodies and Key Stakeholder Groups in the ISO/TC 207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Standards Development Activity*, p.2.
- 21) 황상호, 조재립, 「뉴-라운드를 고려한 ISO 14000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산학협력기술연구논문집』 vol.6(2000): 64.

기 위해 각국의 환경표준의 조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국제표준이다. 두 규범 모두 환경과 성장의 양립을 도모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이 환경의 보전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자유무역규범은 환경표준의 조화를 통한 자유무역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Ⅲ. 한국 내 환경경영표준의 확산

1. 한국정부의 법제화

한국정부는 1996년 ISO14000의 발간 전부터 제정과정에 참여하여 동향을 살피고 국제환경표준의 발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²²⁾ 1996년 10월 ISO14000가 발간, 공표되자마자 한국정부는 비강제적, 비정부적 성격을 가진 국제환경경영표준을 법제화하며 주도적으로 도입하였다. 국제환경경영표준의 법제화는 1)환경경영체제의 도입과 인증의 규정 2)국내표준과 국제표준의 조화, 3)환경경영체제 지원 단계를 거친다.

먼저, ISO14001은 한국에 1995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로 법제화 되었다. 이 법안은 1995년 11월 수정가결되어 12월에 법률 제5085호로 공표되었다. 환친법은 제2조 3항에 환경경영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이 조항을 통해 ‘환경경영’이라는 국제규범이 한국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에 제·개정되는 법에서 사용되는 환경경영 개념을 처음으로 규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3장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규정한 제15조부터 제23조에서는 ISO에서 발행한 ISO14001 인증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6년 7월에는 환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 제 15117호 『환경친화적 산업구

22) 공업진흥청 표준국, 「환경에 관한 국제표준화 동향 및 대응방안」, 『전기저널』 No.203, 1993.

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환친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 시행령 환친법에 근거하여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명령을 담고 있다(제16조~제19조). 특히 제16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민간추진본부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하여 환경경영 확산을 위한 민간 파트너로서 대한상공회의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민간추진본부가 1997년 5월 발족하였다. 1996년 8월에는 환친법과 환친법시행령에 근거한 통상산업부령 제47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환친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환친법과 시행령에서 지정한 세부지침을 담고 있다.

2001년 개정된 환친법은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정부인증체제에서 민간인증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였다.²³⁾ 2005년 개정안은 부실인증신고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였다.

1999년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은 제24조에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관리시스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관리시스템(ISO 14000 표준시리즈)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경경영체제인증에 대한 조항을 규정해놓음으로써 정부가 국제환경경영표준을 국내제도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또한 2009년 개정되면서 표준인증심사제와 각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국내표준과 국제표준의 조화를 규정함으로써 국제표준의 국내화를 도모한 법률은 『산업표준화법』과 『국가표준기본법』이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은 환경경영체제 인증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제5조, 제20조, 제26조에 국제표준과의 협력,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의 부합화를 위한 내용²⁴⁾을 포함하여 국제표준인 ISO14000이 국가표준으로 제정되는

23)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법률 제6590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타)일부개정, 2001.12.31.

근거가 되었다. 산업표준화법은 1997년 개정되면서 국제표준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제2조와 제28조에 국제표준 부합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 내용을 포함하여 국제표준인 ISO14000이 국내표준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셋째, 환경경영체제가 확산될 수 있게 제도를 지원하도록 환경 법률이 개정되었다. 1995년 12월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에 대해 환경친화기업 지정에 우선권을 주었다.²⁵⁾ 이 제도는 2003년 앞선 두 법률에서 삭제되면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제19조에 ‘환경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 시 우대하여야 한다’²⁶⁾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2006년에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한 환경경영 내용을 포함하며(제2조와 3조) 제12조에 ‘환경경영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정보 등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²⁷⁾고 규정하여 환경경영을 지원하였다.

2. 한국에서 ISO14001 인증의 확산현상

한국은 2008년 ISO14001 인증수 세계 6위로 세계적으로 높은 인증률을 보이고 있다. 국제환경경영규범은 ISO14000시리즈에서 인증제도로 운영되는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의 인증수를 지표로 얼마나 많은 기관이나 기업이 ISO14001 인증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로 환경경영의 내재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한국에서 ISO14001의 인증발급 현

24) 국회 법률지석정보시스템, 법률 제5930호 국가표준기본법, 제정 199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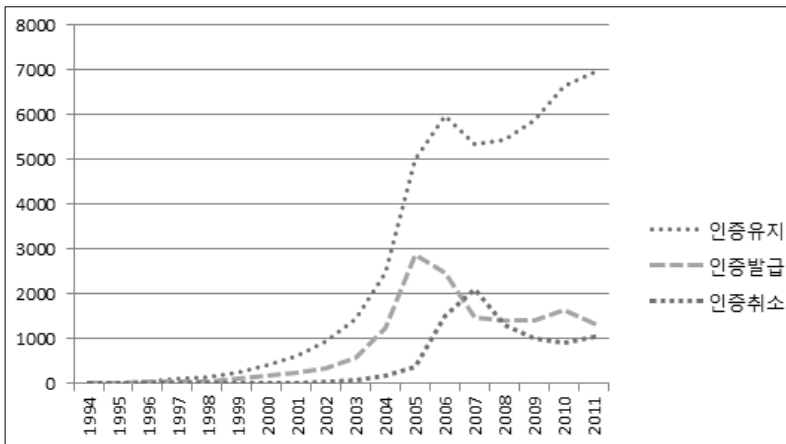
25)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법률 제5095호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9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5.12.29.

26)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법률 제6913호,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3.5.29.

27)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법률 제7864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05.3.3.

황을 확인하고 한국 내 환경경영규범의 확산을 검토한다

한국인정원에서는 ISO14001을 포함하여 ISO9001, TL9000, ISO22000, K-OHSMS 18001 등의 인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그림 1는 한국 인정원 산하 인증기관들의 인증실적 보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국인정원 통계이다.



출처: 한국인정원 통계 (www.icin.or.kr)

<그림 1> 연도별 국내 ISO14001 인증현황

그림 1의 그래프를 보면 ISO14001의 인증규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96년 47개 기업에서 시작하여 2011년 7000여 개에 가까운 기업이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ISO14001 인증기업 수는 2000년대 들어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발급수도 그와 같은 양상으로 증가하는데 2005년 정점을 찍고 발급 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2007년에는 인증취소 수의 상승과 더불어 인증 유지 기업의 수가 다소 하락하다가 이듬해부터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1997년부터 2011

년까지 15년간 연평균 인증증가율은 44.17%이고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던 2001년부터 2005년 5년간 연평균 인증증가율은 66.6%였다. 2007년에는 -10.85%로 2006년도에 비해 인증 기업 수가 하락하였다. 한국인정원은 이에 대해 2006-7년 높은 인증취소율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최초 인증획득 기업의 사후관리 비용 부담에 따른 인증포기를 원인으로 분석하였다.²⁸⁾ 서울신문은 취재를 통해 인증 받은 ISO14001 1만 400여건²⁹⁾ 중 4900여 건(47%)가 취소되었고 그 이유의 대부분이 ISO 발급과 사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인증효과가 없기 때문이라 밝혔다.³⁰⁾ 이를 통해 기업의 인증취소 요인 중 큰 부분이 인증발급·유지비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ISO14001 인증을 발급받는 기업들의 인증획득 요인은 이근희(2006)의 논문과 2003년 환경경영시스템 현황조사³¹⁾에 근거하여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근희는 연구에서 ISO9001과 ISO14001 인증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ISO14001 인증하는데는 회사의 이미지 개선, 마케팅 수단으로의 활용에 목적을 갖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기업과 해외기업의 경우 고객의 요구, 경쟁자의 인증, 수출지원, 이미지 개선 등 외부요인에 더 목적을 두고 있다.³²⁾³³⁾ 2007년 환경부가 실시한 “기업 환경경영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서는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제품 인지도(97.6%), 경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및 생산

28) 한국인정원, 「국내 ISO 인증동향」, 『인증 포커스』 9권 2008년 봄호, p.52.

29) 기술표준원은 2008 기술표준백서에서 한국인정원과 외국계 인정원 산하 인증기관을 통틀어 ISO14001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관이 12,482 곳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30) 서울신문, 「ISO 인증 발급도 관리도 엉터리」, 2009.3.21. (검색일:2012년 5월 6일)

31) 조사 내용은 환경부 발간 『기업 환경경영 실태조사 최종보고서』(2007)에 수록되어 있음.

32)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지는 않지만 해외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외부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33) 이근희, 「ISO9000/ISO14000 인증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품질경영학회지』 제 34권 2호, 2006.

성 향상 달성(87.8%), 모기업, 고객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구(78.0%) 등이 ISO14001의 도입계기로 꼽혔다.³⁴⁾ 이 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을 때 기업들은 거래자나 소비자에 대한 고려로 인해 ISO14001을 인증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경영체제는 정부에 의해 법제화되며 도입되어 인증 업체수의 증가와 함께 규모 면에서 국내에 확산되고 있다. 2007년 이후에는 신규발급 숫자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ISO14001 국내 인증시장이 안정권에 들어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³⁵⁾

IV. 환경경영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과 내재화

1. ISO14001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방향

한국정부는 환경보다는 수출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경영표준을 정책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환경경영체제인 ISO14001은 환경을 고려한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정책적으로는 환경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함보다는 해외 수출규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1996년 환친법으로 환경경영체제를 처음 국내로 도입한 김영삼 정부로부터 현재 이명박 정부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론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환경경영체제는 해외수출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진행되어왔다.

환친법에 그 기반을 두는 환친법 종합시책은 1997년,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되었다. 1차 종합시책은 김영삼 정부 때 발표되었다. 제1차 종합시책에서는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은 ‘경쟁력 저하, 에너지 등 자원부족, 인력난, 환경 및 안전문제 등 우리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동시에

34) 환경부, 『기업 환경경영 실태조사』, 2007, p.7.

35) 한국인정원, 「국내 ISO 인증동향」, 『인증 포커스』 16권 2009년 겨울호, p.39.

해결할 수 있는 산업발전방향'이라 정의하고 있다.³⁶⁾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종합시책에서는 '환경' 자체에 대한 고려보다는 대대적인 산업구조의 전환을 통해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약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민간추진본부로 선정된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시책의 추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는 산업계 주도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려 했다가 보다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1차 종합시책은 기본적으로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ISO14000시리즈를 강권규범이나 실질적인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³⁷⁾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을 모색하는 한편 환경을 기업 경쟁력의 한 요소로 분류하여 선진국에 비해 산업의 생산성이 낮고 에너지효율이 불리한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생산성 수준은 1995년 기준 선진국의 50~60% 수준³⁸⁾이라는 분석도 있다.

2003년 공표된 2차 종합시책 또한 수출에 관한 고려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2차 종합시책에서는 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 정밀화학, 제지, 섬유, 철강, 도금 등 9개 산업분야 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현황과 시책을 제시한다. 각 분야 별로 수출시장동향과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 및 전망이 한 절로 들어가 분석되고 있으며 환경규제로 인한 수출시장 접근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추진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규제가 각 산업에 주는 영향은 수출경쟁력의 약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시 수출 자체의 어려움, 무역장벽으로서 환경 기준과 표준 등이 있다. 국내산업의 환경경쟁력은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비해 대응력이 낮고 국제환경산업시장에 접근하기에 매우

36) 통상산업부, 『제1차 종합시책』, 1997.

37) 이견우(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장), 「국내외 환경규제동향과 산업대책」, 『환경친화적 산업활동 촉진방안과 과제』, 대한서울 상공회의소, 1996.

38) 이견우, 1996, p.21.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제환경규제와 환경 협약의 강화가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을 규제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³⁹⁾ 2차 종합시책은 청정생산시설의 확충과 환경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한 대비와 수출 시장의 확보에 중점을 둔 산업정책이라 볼 수 있다.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도 추진되었다. 1998년 처음으로 실시된 ‘중소기업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해외규격인증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ISO14001도 이 중 하나의 규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업은 1998-99년 83억원의 예산으로 110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05년 214억원의 예산으로 6250여 업체를 지원하였다.⁴⁰⁾ 즉 국제환경경영표준은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 이외에 수출을 위해 획득해야하는 국제시스템규격으로써 작용하기도 한다. 2005년에는 ‘무역·환경 정보 네트워크’⁴¹⁾가 개설되어 무역과 연계된 해외각국의 환경규제, 환경표준, 환경협약협상 및 국내 제품환경정책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국제환경쟁력 강화를 지원⁴²⁾하였고, 2006년에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⁴³⁾가 개설되어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종합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고 종합지원실을 운영해 수출기업에게 국제환경규제를 넘어 수출의 활로를 열어주려는 노력을 보였다. 2007년에는 ‘수출지원센터 포털’⁴⁴⁾을 개설해 해외규격인

39) 산업자원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 2003.

40) 인증획득지원사업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성과와 발전방향, 2006년 1월, http://www.exportcenter.go.kr/standard/tech_data/cert_journal_read.jsp?jrn_id=297 (검색일: 2012년5월7일)

41) <http://ten-info.com/>

42) 무역·환경 정보 네트워크, 주요업무와 사업목적, <http://ten-info.com/>(검색일: 2012년 5월 4일)

43) www.compass.co.kr

중정보를 제공하고 수출동향, 국제환경규제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도 이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비관세 수출장벽이 될 수 있는 국제규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을 획득하도록 장려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제도이다. 이렇듯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ISO14001은 환경에 대한 고려와 표준의 조화라는 자유무역 규범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완전히 수출에 대한 고려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영삼 정부는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으로의 전환’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환경과 성장의 조화’, 이명박 정부는 ‘환경을 통한 성장’에 중점을 맞춤으로써 환경에 대한 고려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정부가 환경과 무역 중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비교해보기 위해 환친법에서 사용한 용어에 근거하여 환경과 경제성장에 관한 키워드를 각각 6개씩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친법 제1조에 근거하였고 환경산업/환경시장은 제2조의 2의 환경설비를 포함하여 환경 관련 산업과 국제적인 환경시장을 통칭하는 키워드이다. 무역규제조치/무역장벽/국제환경규제/그린라운드는 제9조의 2 국제환경규제를 근거로 관련된 키워드를 한 묶음으로 사용한다. 청정생산과 청정생산기술이 성장과 환경의 카테고리로 나뉘는데에는 제2조 1에 근거한 청정생산기술 개념에서 유래하는데, 문단 내 맥락에 따라 환경에 방점을 두고 생태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청정생산기술은 환경에, 환경기술의 수출과 국내에서의 수입대체에 초점을 둔 개념은 성장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문서는 기본적으로 각 정부별로 1997년 통상산업백서(1997년, 김영삼), 2001년 산업자원백서(2002년, 김대중), 2006년 산업자원백서(2007년, 노

무현), 2010년 지식경제백서(2011년, 이명박)을 중심으로 한다. 이 문서들은 모두 1995년 제정된 환친법에 관련된 정책내용을 한 절로 두고 있다. 각 정부별로 한 권씩, 정부의 5년 정책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정권 마지막 해 백서를 선정하였는데, 한 해를 정리하는 백서가 이듬해 발간하는 것을 감안하여 각 정권 임기 내에 발간된 백서 중 가장 마지막 해 발간본을 선정하였다. 정부 발간 백서는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장에 각 키워드가 몇 번 들어가는지 셀 수 있다. 따라서 각 백서별로 키워드를 세는 작업을 하였다. 환경산업, 청정생산기술 같은 경우에는 환친법에 규정된 정책으로써 백서에서 하나의 세부항목으로 정해져 정책내용이 설명되었기 때문에 추진된 제도나 정책의 수로 셈하였다.

<표 1> 산업백서 별 성장/환경에 대한 키워드 반복 횟수 분포

	키워드	1997	2001	2006	2010
수출/성장	무역규제조치/무역장벽/국제환경규제/그린라운드	8	4	14	9
	경제성장/개발		1		1
	국제경쟁력/환경경영전략	2	3	8	4
	환경시장/환경산업	1	3	4	6
	환경기술/청정생산기술	3	1	4	4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1	1	7	3
	환경보전/개선/오염/예방		2	2	2
	청정생산/생태효율성		3	2	1
	사회적 책임			1	1
	자발적인 환경경영	1	1	1	

출처: 통상산업백서(1997), 산업자원백서(2002, 2006), 지식경제백서(2011)

표 1에서 보듯이 환친법 관련 정책은 환경과 수출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지만 수출과 성장 쪽으로 더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무역장벽, 국제경쟁력 등의 키워드는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국내기업

의 수출시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성장이나 개발이라는 직접적인 단어의 언급은 적게 나타나지만 무역장벽에 대비함으로써 수출시장을 확보하려는 성향이 나타난다. 환경시장, 환경기술은 환경을 산업의 한 분야로 보아 환경기술과 설비를 육성하여 점점 규모가 커지는 국내외 환경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이다. 이 또한 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해 해외 환경산업 시장에 진출하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은 2006년 산업자원백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으로 보이나 같은 책에서 동시에 무역장벽 키워드도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환경보다 수출/성장에 정책의 중점이 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로써 한국정부는 정권에 상관없이 수출장벽에 대한 대비로서 ISO14001을 법제화하고 정책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경제가 무역의존도⁴⁵⁾가 높고 한국의 성장에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는 각각 43.4%와 38.8%이고 무역의존도는 82.2%(2009년)로 G20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⁴⁶⁾ 강현수(2011)는 장기적으로 무역의존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원인이 된다면 한국경제에서의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무역의 활성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⁴⁷⁾ 김영삼 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2009년 통계까지) 평균 무역의존도는 61.54%였고 수출의존도는 31.62%이다.⁴⁸⁾ 이처럼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ISO14001을 환친법으로 수용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지원을 통해 내재화하였다.

45) 무역의존도란 특정국가의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46) 이영태, “한국, 무역 의존도 G20 중 1위”, 한국일보, 19면, 2010년 9월 13일.

47) 강현수, “한국의 무역의존도와 경제성장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4권 4호, 2011.

48) 무역의존도 수치는 강현수, 2011, p.2141 표1에서 1960년부터 2009년까지 제시된 한국의 무역의존도 지표를 차용하였음.

2. 정부의 환경경영규범 내재화

행정부가 ISO14001의 인증을 독려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 보다 직접적으로 행정부의 환경경영에 대한 정책의지를 볼 수 있는 지표는 중앙정부기관의 ISO14001 인증여부이다. 사적 기업체 뿐 아니라 국가기관도 ISO14001을 구축하고 인증 받을 수 있다. 2003년 한국인정원 발표한 “공공부문의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도입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도 민간 기업과 동일하게 ISO14001을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공공부문의 환경성과를 높이기 위해 ISO14001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⁴⁹⁾ 이 절에서는 국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ISO14001 인증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환경경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인한다. 국가 공공기관과 그 중 국가 공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부문에서 환경경영규범의 내재화 여부를 검토한다.

(1) 공공기관의 ISO14001 인증현황

ICIN에 등록된 업체 중 정부소속 기관이거나 지방정부는 모두 185개이다.⁵⁰⁾ 다음 표 2는 행정부별 공공기관의 인증 발급수와 증가율을 제시한다. 김영삼 정부 때 1개 기관에 지나지 않던 공공기관의 ISO14001 인

49) 한국인정원, “공공부문의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도입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2003년 8월.

50) 2011년까지 인증을 발급 받은 공공기관의 수이다. ISO14001의 인증범위코드에는 공공행정을 코드36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전기공급(코드25), 수도공급(코드27) 등 정부기관에 소속된 기관들이 코드36 이외에도 분포하고 있어 ‘공사’, ‘공단’ 등의 키워드 검색과 2012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에 지정된 기관들을 ICIN에서 검색하여 총 190개의 공공기관이 ISO14001 2012년 5월(검색일 기준)까지 인증을 발급 받았으며 그 중 18개 기관이 2011년 이전에 인증을 취소(갱신하지 않음) 하였다는 정보를 구축하였다. 2012년 상반기에 인증받은 5개 기관은 제외하고 2011년 받은 기관까지 포함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소속 공공기관들이 거의 공단이나 공사의 형태를 가지는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구청, 군청 단위로 ISO14001을 구축, 인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황성군청, 강릉시청, 강원도청 등은 청사에 직접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증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노무현 행정부 때는 64개, 이명박 행정부 99개로 시간이 갈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공공기관 내에 ISO14001 인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양적인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인증 취소 기관의 숫자도 많아지고 있다. 2011년까지 인증을 유지하는 공공기관은 167개이다.

중앙 정부 소속 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청사나 본부건물에 ISO14001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행정부와 지방정부가 환경경영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정책의지를 표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가 공공기관은 기업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증구축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거의 갖지 않는다. 또한 ISO14001의 인증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나 제재도 존재하지 않아 국가 공공기관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할 이유도 없다.⁵¹⁾ 따라서 국가 공공기관 내 환경경영체제 구축은 자발적인 측면이 강하다. 국가 공공기관들은 환경적 이미지 개선, 환경효율적 체제로의 전환 등 환경 관리적 차원의 이유에서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다.⁵²⁾

<표 2> 공공기관의 인증 발급/취소 현황

		ISO14001인증발 급공공기관	백분율 (%)	증가율	ISO14001 인증취소 공공기관	백분율 (%)	증가율
행정부	김영삼	1	0.54%		0	0	
	김대중	21	11.35%	2000%	0	0	
	노무현	64	34.59%	205%	5	27.78%	
	이명박	99	53.51%	55%	13	72.22%	160%
	계	185	100%		18	100%	

출처: ICIN(www.icin.or.kr)

51) 한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도구로 환경경영체제를 도입토록 공공기관에 지시한 바는 없다. 한국인정원, 2003, p.11.

52) 한국인정원, 2003, p.11.

(2) 공기업 ISO14001 인증 현황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 1월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지정된 공기업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28개를 뽑아 ISO14001 인증 여부를 확인하였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서는 정부가 직접 출자하고 사업의 규모도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큰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공기업 중 인증을 받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공공기관 내 ISO14001의 내재화 현상을 확인해 본다.

총 28개 공기업 중 17개 기업이 ISO14001 인증을 받고 있으며, 각 기업이 소유한 사업장마다 ISO14001을 구축, 인증을 받았다. 예를 들어 한국 마사회의 경우는 제주, 서울, 부산 경마공원이 사업장별로 각각 ISO14001을 2006-2007년에 걸쳐 구축하였고 한국 서부, 중부, 남부, 동서, 남동발전(주)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ISO14001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 이 중 2011년에 인증이 완료된 인천국제공항 이외에는 모두 2012년 현재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표 3> 공기업의 ISO14001 인증현황

		공기업	백분율
인증여부	받음_유지	16	57.14%
	받음_취소	1	3.57%
	받지않음	11	39.29%
	총계	28	100%

표 3에서 보듯이 28개 국가 공기업 중 57.14%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고 인증을 받지 않은 공기업은 39.29%로 인증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에서 환경경영규범의 내재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정부는 수출정책에 기반을 두고 환경경영체제를 도입, 국내에 새로운 환경경영규범을 내재화시키는데 법적,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국가기관과 공기업에 스스로 환경경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책의지를 표현하고 환경규범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한국정부는 ISO14001을 자유무역 증진의 기제로 접근하였지만, 규범을 수용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도 환경경영표준을 내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한국 기업 내 ISO14001 인증의 양상

앞 절에서 한국정부는 수출에 방점을 두고 ISO14001 정책과 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직접 비용을 지불하면서 ISO14001의 규격에 따라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 받는 기업은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수출규격으로써 ISO14001을 인증 받는가?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기업은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써 환경경영을 추구함으로써 환경성과를 개선하고 친환경적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유무역규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ISO14001을 해외 수출규격으로 인식하여 원활한 수출로의 확보를 위한 도구로 ISO14001을 인증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자료 및 연구 방법

표본의 선정은 한국인정원 산하 ISO경영시스템인증정보 포털(ICIN, 이하 ICIN)⁵³⁾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증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다. ISO14001을 인증하는 국내 인증기관 중에 2000년 이전부터 인증을 해온 인증기관 5개를 선정하여 1994년 시범인증부터 2011년까지 인증받은 기

53) ISO Certification Information Center <https://www.icin.or.kr>

업 1740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한국 내에서 2000년 이전부터 인증업무를 시작했던 인증기관은 12개이다. 이 중 가장 초창기부터 인증업무를 시작했던 DNV인증원(1993년부터 ISO14001 인증시작)과 로이드인증원(주)(1993), (재)한국품질재단(1996), (주)크레비즈큐엠(1997), 한국SGS(주)(1997)를 선정하였다.⁵⁴⁾

자료는 ICIN을 통해 인증기업의 기업명, 인증범위코드, 인증발급일, 인증취소일, 지역에 관한 정보를 얻어 코딩하였다. 인증기업의 기업규모(상시종업원 수)와 수출입여부, 주요교역국가에 대한 정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기업정보를 코참비즈⁵⁵⁾ 사이트에 인증기업을 검색하여 코딩하였다. (재)한국품질재단 587개, (주)크레비즈큐엠 647개, DNV인증원 264개, 로이드인증원(주) 194개, 한국SGS(주) 156개 등 총 1848개 기업을 검색하였고 그 중 정보가 없는 기업을 제하고 총 1740개 기업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⁵⁶⁾

54) 이 다섯 인증기관은 1997년 이전에 인증업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의 재임기간의 인증기업 정보를 담고 있어 이후 다른 정권들과의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중 (재)한국품질재단, (주)크레비즈큐엠은 한국인정원에서 인정을 받은 인증원이고 DNV인증원, 로이드인증원(주), 한국SGS(주)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인정기관에서 인증업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인증원이다. 표본을 통해 한국인정원과 외국계인정원의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의 비교도 할 수 있다.

55) 코참비즈 <http://www.korchambiz.net>

56) 표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ISO14001 인증업무를 초기부터 해온 인증원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인증업무를 시작하였으나 현재 높은 인증률을 보이고 있는 인증원에서 인증받은 기업들이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가장 ISO14001를 많이 인증해준 (주)ICR 인증원은 미국인정원인 ANAB에서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인데 2005년 첫 인증을 시작하여 현재(2012년 4월 5일 검색) 적어도 4326개 기업에 인증을 발급하였다.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정부까지 인증기업 속성의 흐름을 보기에는 적합하나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한 외국계 인증기관에게 인증받은 기업들이 표본에서 다소 과소대표되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O14001 발간 이후 4개의 정부별로 산업계의 규범 내재화 정도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라 할 수 있다.

2. 분석 결과

1) 인증 유지/취소의 유인

(1)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환경경영체제 인증 비교

기업이 정부의 프레임िंग대로 자유무역의 측면, 즉 수출을 위해 ISO14001 인증을 받았다면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간 인증의 유지와 취소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수출입여부와 인증유지 여부를 교차분석 하였다.

<표 4> 수출입여부와 인증유지/만료 여부 간 교차분석

	인증유지	인증만료	총계
내수기업	284 80.68%	68 19.32%	352 100%
수출기업	545 89.05%	67 10.95%	612 100%
총계	829 86%	135 14%	964 100%

Pearson $\chi^2(1) = 13.0012$ Pr = 0.000

표 4에서 보듯이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인증유지율이 더 높다. 인증유지와 만료의 비중에서 인증을 유지하는 비중이 내수기업보다 수출기업이 더 높다. 수출기업은 인증을 받고 그것을 갱신하여 유지하는데 비용을 지불할 유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시장 접근에 있어 ISO14001이 국제규격으로 사용됨으로써 내수기업보다는 수출기업이 인증을 유지할 유인이 더 크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기업의 규모(대기업/중소기업)와 업종(제조업/서비스업)의 교차분석에서는 인증의 유지와 만료 비중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기업의 규모는 인증을 유지하거나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비슷한 비율로 인증의 유지와 만료 비중이 나타나며 업종도 마찬가지이다.

(2) 한국계/외국계 인증원과 수출기업

한국에는 한국인증원의 인정을 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이하 KAB)⁵⁷⁾과 미국(ANAB)이나 영국(UKAS) 등 외국인증원의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이하 FAB)⁵⁸⁾이 ISO14001의 인증을 담당한다. 본사를 외국에 두고 있는 외국계 인증기관의 한국지사가 한국인증원의 인정을 받기도 하고 한국을 본사로 하는 인증원이 FAB의 인정을 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다음 표 V-6는 한국인증원에 인증보고를 하는 인증원들의 현황이다.⁵⁹⁾ 한국의 인증시장 규모가 시간에 따라 점점 커감을 볼 수 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증원들의 한국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증원에 보고하지 않는 기관을 합치면 그 숫자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한국 인증원 현황

정부	한국기관_ 한국인증원 ⁶⁰⁾	외국계기관_ 한국인증원 ⁶¹⁾	한국기관_ 해외인증원 ⁶²⁾	외국계기관_ 해외인증원 ⁶³⁾	계
김영삼	2	2	0	4	8
김대중	13	0	3	13	29
노무현	8	4	10	27	49
이명박	0	1	8	17	26
계	23	7	21	61	112

57) 이후 KAB는 한국인증원 산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을 총칭한다.
 58) 이후 FAB는 외국인증원 산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을 총칭한다.
 59) 인증보고운영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증기관들은 한국인증원에 인증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60) 한국인증원의 인정을 받는 한국 인증업체
 61) 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서 지사활동을 하는 외국계 인증기업 중 한국인증원의

외국계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취득한 경우의 장점은 해당국가와 연계된 경영이나 품질보증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 업무의 진전이 수월하다는 점이다.⁶⁴⁾ 해당 국가의 인증규격으로 심사를 받으면 그 국가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제규격 취득에 있어 호환이 가능하고 수출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계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는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업의 수출여부와 한국/외국계 인정기관 산하 인증기관에서의 발급 관계를 확인해본다. 수출에 관련된 기업이 수출을 위해 외국계 인증기관에서 발급 받는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해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표 6> 한국/외국 인정원 여부와 수출 여부 간 교차분석

	내수기업	수출기업	총계
KAB	577	547	1,124
	51,33%	48,67%	100%
FAB	210	396	606
	34,65%	65,35%	100%
총계	787	943	1,730
	45,49%	54,51%	100%

Pearson chi2(1)= 44,1820 Pr = 0,000

표 6에서 보면 KAB보다 FAB에서 수출기업의 비중이 크다. KAB와 FAB를 비교해 봤을 때 수출기업이 FAB에서 인증받는 경향이 더 큼

인정을 받은 기관

- 62) 한국인증기관이 해외 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많은 경우 한국인정원과 외국 인정원의 인정을 동시에 받고 있다.
- 63) 해외인정기관에 속해 있는 해외 인증기업
- 64) “국내 ISO인증 현황과 문제점”, 가스신문, 2002년 1월 4일. <http://www.gasnews.com>
(검색일: 2012년 5월 4일)

알 수 있다. 내수기업들이 한국인정원 산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비율이 큰 데 비해 수출기업들은 외국인정원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수출기업이 ISO14001을 인증 받는 목적이 단순히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수출대상국의 인정을 받는 인증을 보유함으로써 수출시장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ISO14001의 인증발급 분석

산업계의 환경경영규범 내재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업 인증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알아보기 위해 시간의 단위를 정부별로 분류하였다. 이로써 정부 간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표 7는 ISO14001 발급받은 기업들을 정부기간별로 분류해 놓은 표이다. 김영삼 정부 때 66개 기업이 ISO14001을 인증 받았고 김대중 정부 때는 196개 기업이 인증을 받으면서 매우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 후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기 인증율은 표본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인증을 발급받는 기업의 수가 늘어남을 볼 수 있다.

<표 7> 정부 별 인증발급 기업 수

정부	인증발급 기업수	백분율(per)	인증증가율(%)
김영삼	66	3.83%	
김대중	196	11.38%	197.0%
노무현	562	32.62%	186.7%
이명박	899	52.18%	60.0%
Total	1,723	100%	

(1) 수출입여부

먼저 기업의 수출여부에 따라 인증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부별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인증율을 분석해 보았다. 표 8에서

보다시피 인증초기에는 수출기업 위주로 인증을 받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수기업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 오히려 내수기업이 수출기업보다 인증을 발급받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 수출기업은 큰 격차 없이 꾸준히 인증이 증가해 온 반면 내수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증률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ISO14001이 수출기업에서 시작하여 내수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8> 정부와 인증기업 수출여부 간 교차분석

	내수기업	수출기업	총계
김영삼	14 25%	42 75%	56 100%
김대중	67 34.18%	129 65.82%	196 100%
노무현	202 35.94%	360 64.06%	562 100%
이명박	495 55.06%	404 44.94%	899 100%
총계	778 45.42%	935 54.58%	1,713 100%

Pearson chi2(3)= 73.4713 Pr = 0.000

(2) 기업규모

수출입 요인 이외에 인증 받는 기업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기업규모에 크기에 따라 교차분석하였다. 표 V-15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소기업, 대기업의 인증 비중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중소기업운영법에 따라 300명 이상은 대기업, 300명 미만은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다.

표 9에서 보듯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사이의 비중은 정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ISO14001 인증 초기인 김영삼 정부 때는 대기업 위주로 인증 받는 경향을 보이다가 김대중 정부 때 비슷한 인증비율을 보이고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는 중소기업의 인증비율이 더 크게 나타난다. ISO14001 인증 초기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 진행되던 인증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중기업으로, 마지막에 소기업까지 확대되어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으로 ISO14001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SO14001은 경영시스템 인증제도로써 인증을 구축하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용을 감수하고도 중소기업의 ISO14001 인증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ISO14001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9> 정부와 기업규모 간 교차분석

	중소기업	대기업	총계
김영삼	15	51	66
	22,73%	77,27%	100%
김대중	109	87	196
	55,61%	44,39%	100%
노무현	416	146	562
	74,02%	25,98%	100%
이명박	702	197	899
	78,09%	21,91%	100%
총계	1,242	481	1,723
	72,08%	27,92%	100%

Pearson chi2(3) = 123,4714 Pr = 0,000

표본의 분석결과 기업차원에서 ISO14001의 확산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업의 ISO14001 인증 동기에는 수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비해 ISO14001 인증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

며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 업종(제조업/서비스업) 차이는 인증유지·만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수출기업은 ISO14001인증을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받는 경향이 있다. 이는 수출지역에서 인정하는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시장의 원활한 진출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기업의 ISO14001 구축에는 기업의 이익과 경영전략이 유인이 된다.

셋째, 수출이 동인이 되어 기업 내 ISO14001의 수용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출기업에서 내수기업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ISO14001이 확산된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ISO14001이 특정 분야를 넘어 내재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소재 기업들이 한국에서 ISO14001을 인증 받는 현상 또한 한국에서 ISO14001이 환경적 측면에서도 고려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VI. 결론

국제환경경영표준은 1996년 환친법을 통해 도입된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다. 정부는 환친법에 의거한 종합시책과 환경경영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장려했다. 한국정부는 지속가능발전과 자유무역규범의 속성을 동시에 가진 환경경영표준을 수출의 기제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종합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은 주로 국제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무역장벽에 대한 대비와 수출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혜택도 주로 수출기업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네정권에 걸친 산업백서를 검토해보았을 때 한국정부는 환경보다는 무역의 관점에서 이 규범을 접근한다. 기업 또한 수출기업 위주로 인증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인정원보다 외국인정원에서 받은 인증을 유지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수출기제로서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장려했던 정부의

정책과 상응하는 결과이다.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있어 기업은 이익에 기반하여 움직인다.

ISO14001로 대표되는 환경경영규범이 한국 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부는 ‘수출’,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고려를 가지고 ISO14001을 법제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켰다. 이는 한국경제가 무역의존도⁶⁵⁾가 높고 한국의 성장에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는 각각 43.4%와 38.8%이고 무역의존도는 82.2%(2009년)로 G20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⁶⁶⁾ 강현수(2011)는 장기적으로 무역의존도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원인이 된다면 한국경제에서의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무역의 활성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⁶⁷⁾ 김영삼 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2009년 통계까지) 평균 무역의존도는 61.54%였고 수출의존도는 31.62%이다.⁶⁸⁾ 이처럼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ISO14001을 환친법으로 수용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지원을 통해 내재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ISO14001이 가지고 있는 자유무역 속성은 한국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발전주의⁶⁹⁾ 규범과 잘 맞아 떨어졌다. 또한 한국정부는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산업을 육성시켜온 발전국가⁷⁰⁾의 성격을 갖고 있다. 1990년대 한국정부는 발전국가에서 규제

65) 무역의존도란 특정국가의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66) 이영태, “한국, 무역 의존도 G20 중 1위”, 한국일보, 19면, 2010년 9월 13일.

67) 강현수, “한국의 무역의존도와 경제성장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4권 4호, 2011.

68) 무역의존도 수치는 강현수, 2011, p.2141 표1에서 1960년부터 2009년까지 제시된 한국의 무역의존도 지표를 차용하였음.

69) 개발주의, 경제성장주의라는 말과 혼용되어 쓰인다. 이는 자연을 개척하여 유용하게 하거나 기술·경제·산업 등을 발전시키며 물질적이나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을 뜻한다. 한국 발전주의/개발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명래, “한국 개발주의의 역사와 현주소”, 『환경과 생명』 통권 37호, 2003; 김철규, “한국의 개발주의와 환경갈등”, 『한국사회』 제9집 1호, 2009.

70) 특정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 보호 및 육성정책을 수립·실천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경기를 부양하려 노력하며 이를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발전국가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⁷¹⁾ 이러한 맥락에서 ISO14001은 자유무역규범 측면에서 접근하기가 더 용이하였고 한국기업의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발전국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한국정부와 기존규범으로서 발전주의를 가지고 있던 한국사회에서 ISO14001은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자유무역규범과 통하며 그렇기 때문에 ISO14001은 자유무역 증진의 기제로 한국에 수용되었다. 한국정부가 지속가능발전과 자유무역의 속성을 동시에 가진 ISO14000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유무역규범에 기반한 프레이밍을 하는데는 기존 국내규범인 발전주의와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무역의 활성화가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한국 경제에서 발전주의와 자유무역은 공유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ISO14001은 한국 내에 내재화되었고 급격한 확산을 보인다. 이는 Acharya(2004)가 제시한 규범채택(norm acceptance)에 있어, 우선하는 국내규범(prior local norm)과 들어오는 국제규범이 합치될 때 규범이 내재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과 상응한다.⁷²⁾ 규범의 수용자는 국외 규범을 수용자의 인지적 우선순위와 정체성에 맞게 재구성한다.⁷³⁾

체켈(Checkel, 2005)은 국제제도와 사회화에 관한 논문에서 적합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에 따른 사회화를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타입1이라 분류한 역할수행(Role Playing)은 규범이나 제도 수용자가 당면한 상황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범이 내재화 되는 매커니즘이다.⁷⁴⁾ 타입2인 규범적 설득(Normative Suasion)은 행위자가 적극

정부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국가를 말한다.

71) 이연호 외,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정치학회보, 36권 3호(2002).

72) Amitav Acharya, “How Ideas Spread: Whose Norms Matter? Norm Localiz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Asian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8, No.2(2004).

73) *Ibid.*, p.239.

적이고 유연하게 새로운 적합성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을 내재화하는 형태이다.⁷⁴⁾ 즉, 행위자가 새로운 규범에 대해 동조하여 그 규범을 내재화하는 과정을 뜻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라보면 한국의 경우 체켈이 제시한 두 가지 타입 중 타입1인 역할수행을 통해 규범의 내재화가 이루어졌다. 이렇듯 무역과 경제적 이익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던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인증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차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

ISO14001을 직접 구축하고 인증 받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출기업에서 내수기업으로 ISO14001이 확산되면서 ‘수출’에 대한 고려로 시작한 환경에 대한 역할 수행이 환경경영규범의 내재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와 그로 인한 환경의 비관세 무역장벽화라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은 그에 대응하여 ISO14001로 대표되는 환경경영을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환경경영 규범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 정부의 환경경영에 대한 정책과 기업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규범의 수용의 동기에 있어 국제정치학계의 주요 시각인 현실주의의 힘, 자유주의의 이익, 구성주의의 이념 중 이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적 지위와 의무를 요구하지 않은 비정부기구에서 제정한 ISO14000시리즈는 패권국의 이해관계를 담고 있지도 않고 특정 국가의 압력이 작용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1996년 표준이 제정, 공표되자마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로 국제환경경영표준을 법제화하였고 민간추진본부를 선정하여 환경경영 확산을 유도하였다.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이념 또한 이 사례에는 적합하

74) Jeffrey T. Checkel,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ocialization in Europe: Introduction and Framework”,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9. No.4(2005): 810.

75) *Ibid.*, p.812.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환경경영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동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역장벽,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또한 이후에 정부 스스로 환경규범을 내재화 하고 기업도 경제적 이익을 이외에서도 환경규범을 내재화 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즉, 규범수용의 중요한 동기로서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지만 그것이 동력이 되어 역할수행을 통한 내재화가 일어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환경경영체제의 내재화는 다음 두 가지 경로로 나타난다. 한국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경영규범을 내재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환경경영체제를 수출기체로서 접근하고는 있으나 정부 내 기관에 직접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경영규범도 내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계에서 환경경영체제의 확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수출기업에서 내수기업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 기업들은 이익에 기반하여 활동하지만 그것이 동력이 되어 환경경영체제 규범이 국내에 확산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실질적인 기업의 인증 동기나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내부자료나 인터뷰가 부족하다는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와 기업들이 환경경영에 대해 경제적 동기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규범수용에서 내재화로 확산되는 과정의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왜 그러한 것인지, 규범에 대한 내재화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업의 인증동기와 환경규범에 대한 동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통해 추후 연구의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발간보고서>

- 건국대학교 산업기술연구원 심포지움. 1996. 『미래 지향적 기술산업 추진전략』 (1996.9.12.)
- 기획재정부, 2012. 『공기업지정안』
-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기술표준화전략』
-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종합시책(안) 검토결과』.
- 대한상공회의소 편. 1995. 『국내의 환경동향과 한국산업의 선택』,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자원부. 2000-2007. 『산업자원백서』
- _____. 2002. 『지속가능발전 전략』
- _____. 200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종합시책(안)』
- 산업자원부 지속가능보고서. 2006.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 산업통상부. 1997.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종합시책』
- 인증획득지원사업단. 2006.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 지식경제부. 2008-2010. 『지식경제백서』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05-2010. 『기술표준백서』
- 포스코 경영연구소. 2001.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전략』, 산업자원부 연구용역.
- 통계청. 2011. 『한국통계연감』
- 통상산업부. 1997. 『(환친법) 제1차 종합시책』
- 통상산업부. 1997. 『통상산업백서』
- 한국인정원. 2003. 『공공부문의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도입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 한국인정원. 2006-2009. 『인증 포커스』
- 환경부. 2007. 『기업 환경경영 실태조사』
- ICF Incorporated. 1997. The Role of National Standards Bodies and Key Stakeholder Groups in the ISO/TC 207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Standards Development Activity.
- ISO, ISO Survey. 1997-2009.

- _____. 2008. The ISO 14000 family of International Standards.
United Nations. 1987.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논문 및 단행본>

- 강현수. 2011. “한국의 무역의존도와 경제성장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4권 4호.
공업진흥청 표준국, 2003. “환경에 관한 국제표준화 동향 및 대응방안”, 『전기저널』, No.203.
신상범. 2008. “지구환경정치와 지식네트워크-중국의 ISO14001 사례”, 『세계정치』, 제29집 1호.
_____. 2009. “환경정책에서 국가의 역할”, 『아세아연구』 52:4.
이근희. 2006. “ISO 9000/14000 인증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품질경영학회지』, 34:2.
이병욱 외, 2005. 『환경경영』, 에코리브르.
정병기. 2009. “표준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새로운 규범의 가능성 및 표준화 전망”, 『한국정치연구』 18:3.
황상호, 조재립. 2000. “뉴-라운드를 고려한 ISO 14000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산학협력기술연구논문집』 vol.6.
Checkel, Jeffrey T. 2005.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ocialization in Europe: Introduction and Framework”,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9. No.4.
Roht-Arriaza, Naomi. 1995. “ Shifting the Point of Regulatio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Global Lawmaking on Trade and the Environment”, *Ecology Law Quarterly*. 22:479.
Katzenstein, P. J. 1996.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온라인 자료>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www.compass.c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무역·환경 정보 네트워크, <http://ten-info.com/>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지식경제부 www.kats.go.kr

코참비즈 <http://www.korchambiz.net>

한국 인정원 www.kab.or.kr

ISO www.iso.org

ISO 경영시스템인증정보통합포털 www.icin.or.kr

가스신문 <http://www.gasnews.com>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 논문 투고일자: 2013. 03.29

■ 심사(수정)일자: 2013. 04.30

■ 게재 확정일자: 2013. 05.14

Abstract

The Internalization of ISO14000 in Korea and the Role of Government

Jin Sil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cess of acceptance and internalization of the ISO14000 norm.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 (ISO), ISO14000 i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 which characterized as non-governmental and voluntary. It pursues both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concerned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harmonization of different regional environmental standards which encourages free-trade by hindering trade barrier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ccepted and legitimated ISO14000 by an environment-friendly political frame through the “Conversion to an Environmental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ct” and began to introduce the ISO1400 standard withi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country through diverse policies. Further on, with active governmental support, national corporations have also certificated the ISO14001, one of the representative norm of the ISO14000 series, which regulates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

This paper states that the process of internationalization of the ISO14000 standard is basically profit-interest based. Korea’s economic growth is highly interrelated with its dependance on international trade and thus, the paper argues that the national export industry would have been negatively affected if such regulations were not adopted.

Although the different governments in charge, during the whole internalization process had differed on the relevance of the environmental issues, they all had in common a particular interest on improving the

exportation competitiveness of national products by adopting ISO14001. This explains why in Korea, the ISO14000 is a standard required for products able to trade with foreign countries and confirms this study's argument that the adoption of the standard is in line with the need of overcoming barriers to international trade rather than o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 deeper analysis demonstrates that ISO14000 process of internalization was actually a process of localization, by meaning that the standard was framed in accordance to preexistent norm, namely developmentalism, which inclined the framing of the norms towards the trade issue.

Moreover, an empirical study of the tendency of national companies towards adoption of an ISO14001, demonstrates that international trade-oriented companies were more leaned towards its adoption. Thes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governmental pro-trade policies and an profit-based interest on acquiring and maintaining international standard for better access to foreign markets.

Nonetheless, the ISO14001 certification in the Korean industries did not cease here but it get diffused through a hierarchical arrangement, from major to middle and small enterprises and from export-lean to domestic companies. Hence, despite government policies actively emphasized the relevance of the internalization of this standard mainly on export and trade, once ISO14001 was adopted, local agents did play a role in fueling the diffusion of it within domestic companies.

Key Words

ISO14000, Environmental Management, Framing, Norm Internationalization, EMS, International Standard